

## 경제민주화에 대한 통일사상적 고찰

이 준 석

선문대학교 박사과정

- |                            |             |
|----------------------------|-------------|
| I. 시작하며                    | IV. 경제민주화에서 |
| II. 경제민주화의 주요 논점           | 경제평준화로      |
| III. 경제민주화에 대한<br>통일사상적 비평 | V. 마치며      |

### 국문요약

현재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경제성장 정체, 경기 불황, 실업률 증가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소위 재벌로 불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분야도 정치 분야처럼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자본주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주장에 따르면 경영자(자본가)와 종업원(노동자)간 힘의 균형을 위해 노동조합의 힘을 좀 더 강화해야하고, 국가는 복지제도 확대, 재벌규제, 세금 누진제도 등의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제민주화 방안으로는 부의 재분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먼저 통일사상은 민주주의를 이상적 체제가 아닌 탕감복귀시대의 과도기적 체제로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다수의 합의로만 결정하는 부모 없는 불안한 형제주의로 간주하여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부의 불균형은 개성진리체로서의 가치실현을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개인별 적정소유의 수준 또한 양심 뿐 아니라 연체로서의 격위에 따라 다르므로, 노조나 국가의 힘으로 개인별 적정소유의 수준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렵다. 통일사상은 다수의 힘을 통해 소수의 적정소유를 강제하는 경제민주화보다 전 인류적 프로젝트 전개를 통해 인간의 양심과 연체의를 일깨우는 이른바 경제평준화 운동을 제안하며, 이러한 운동이 공생·공영·공의주의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믿는다.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평준화로의 사회적 관심 전환을 위한 재계, 정계, 언론계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경제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경제평준화 공생·공영·공의주의

## I. 시작하며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민주주의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듯이 경제민주화는 재화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sup>1)</sup>

현재 한국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sup>2)</sup> 1980년대 한국의 정치민주화를 통해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였듯이, 오늘의 경제민주화 운동 또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경제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다.<sup>3)</sup> 경제민주화는 국회의 입법으로 구체화

1) 황수연에 따르면 경제민주화(Economic Democratization)는 경제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와 개념이 다르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에서 민주주의는 '1인 1표주의'를 통한 집단적 의사결정과 경제문제의 결합을 강조하는 반면, 경제민주주의 개념에서 민주주의는 소비자 주권의 측면에서 '1원 1표주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이야기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편, 『경제민주화의 함정』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17-18.

2) 경제민주화는 여야의 공통 이슈지만 초점이 다르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다. 새누리당 홈페이지 국민과의 약속 <http://saenuriparty.kr>;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강령/정강 정책 <http://theminjoo.kr> 참조.

3) 변형윤은 경제민주화의 추진 과정이 곧 경제정의의 실현 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 변형윤,

되는데 입법의 근거를 헌법 119조 2항에서 찾고 있다.<sup>4)</sup>

경제민주화 논의는 정치의 힘으로 경제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로 일컫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부의 재분배에 실패하여 양극화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법 제정에 대한 주장들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있어왔지만<sup>5)</sup> 최근 급속도로 사회 이슈화된 배경은 경제성장 정체, 경기 불황, 실업률 증가 등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소위 재벌로 불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분배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일례로 이러한 재분배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적정인가? 대기업 집단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얼마나 더 부과해야 하는가? 현재 노조의 힘은 적정인가?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정인가? 등등 현실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하면 사안은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때로는 거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sup>6)</sup>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과주: (주)지식산업사, 2012), 40.

- 4) 헌법 제119조 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5) 경제민주화에 대한 학계 논문은 1987년부터 발견되며, 정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시기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경제민주화법(김종인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의 제안자 김종인 의원을 보수당인 새누리당에서 파격적으로 영입하면서부터이다. 한편 경제민주화 논의를 이끄는 국내 학자로 '진보경제학계의 대부'로 불리는 서울대 변형운 교수와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이 있다.
- 6) 경제민주화 반대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정책은 독일의 사민당이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스스로 폐기한 실패한 정책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조차 없으며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반시장적 법안들이 정치 포퓰리즘에 편승하여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다양한 비판론은 한국경제연구원 편, 『경제민주화의 함정』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참조. 김종인을 비롯한 주요 학자의 주장을 심층적으로 비판한 자료는 허화평,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다』 (서울: 도서출판 기과량, 2014) 참조.

본고는 이러한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한 주요 논점을 살펴보고(Ⅱ), 그 논점에 대해 통일사상의 입장에서 비평한 후(Ⅲ) ‘공생·공영·공의주의’ 이론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이 전개해온 ‘평준화’ 활동을 두 가지의 키워드로 삼아(Ⅳ) 현실문제의 근본적 해결방향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Ⅱ. 경제민주화의 주요 논점

### 1. 사회민주주의: 양극화 해소의 진보적 대안

세계사를 돌아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종교개혁에서 시작되었다. 종교민주화를 거쳐 정치민주화로, 정치민주화 이후 경제민주화로 옮겨온 것이다. 우리가 종교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종교개혁, 정치개혁이라 부르듯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생각에는 경제민주화를 경제개혁과 동일시하여 경제민주화는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고 진보적 대안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다.<sup>7)</sup>

이러한 경제민주화 논의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보다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인데, 자유를 중시하는 시장경제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시장체제와 자본주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긴 하나, 시장체제는 스스로에 대한 규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정치적 과정을 통해 통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 구성원 간의 협의나 연대를 중요시 한다.<sup>8)</sup>

이와 같이 경제민주화는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바탕에서 제기되는 주장으로<sup>9)</sup> 소득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로 지

7) 한국경제연구원 편, 『경제민주화의 함정』(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24.

8) 노진석, 「한국헌법과 경제민주화」, 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2014), 48-51.

9) 경제민주화의 근거를 대한민국의 개국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철학에서 찾는 학자도 있다. 홍익인간의 철학은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를 발전시키자는 것인데 경제민주화가 바로 자유와 평등의 균형적 실현을 위한 길이라는 주장이다. 이춘구, 『경제민

니계수나 10분위분배율<sup>10)</sup> 같은 소득 불평등 통계를 자주 인용한다. 그리고 소득 격차를 감소시키고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경제민주화 정책 혹은 법안으로 제안한다.<sup>11)</sup>

## 2. 양극화 원인: 레이건과 박정희

경제민주화 논자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부의 양극화 원인으로 각각 지목하는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쪽 나라 모두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미국의 양극화 원인은 지나칠 정도로 시장자율에 맡겼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고, 반대로 한국의 양극화 원인은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무조건 작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며 세계 경제 질서가 다시금 시장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여기에 레이건보다 1년 빨리 영국 수상으로 당선된 마가릿 대처 또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론에 크게 영향을 받아 레이거노믹스의 양대 축을 형성하였다.<sup>12)</sup>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의 자정능력을 신뢰하여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질

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서울: 이지출판, 2013), 8.

10)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모두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이다. 지니계수는 값이 작을수록(0~1 구간), 10분위 분배율은 값이 클수록(0~2구간) 소득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지니계수는 보통 0.4가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하는데 한국은 2013년 기준으로 0.302이다. <http://terms.naver.com> (두산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참조).

11)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경제민주화 과제 34개에 대해 입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전슬기,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경제민주화법 34개 들여다보니」, 《조선비즈》 2016. 8. 24.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용은 크게 공정거래, 금융민주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노동환경 분야로 구분된다. 관련 자료는 민주당 경제민주화 모임 20인 의원 공저, 『을을 위한 행진곡』(서울: (주)메디치미디어, 2013) 참조.

12)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과주: 동화출판사, 2013), 74.

서에 맡기는 것이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하여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또한 자유로운 생산 활동으로 부의 혜택이 넘치면 그 부가 경제 하위계층까지 전달이 되는 소위 낙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배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30년이 지난 오늘, 레이건의 소득 누진세 감면으로 상위 계층의 자산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하위 계층의 자산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사회 환원이나 낙수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경기부양 조치도 효과가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진단한다.<sup>13)</sup>

한편 한국의 경우는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한 일사불란한 강력한 경제개발 계획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지역 양극화, 산업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말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격차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벌의 경우에는 고도성장 시기에 정경유착을 통해 각종 특혜와 비리로 부를 급속도로 축적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재벌가의 천문학적 재산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재벌 때리기 정책은 이러한 시대인식에서 비롯된다.<sup>14)</sup>

### 3. 양극화 해결책 1: 경영자-종업원 간 힘의 균형

경제민주화 논자들은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의 하나로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힘의 불균형을 지적한다. 본래 주주가 경영자의 급여를 적정하게 결정하고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소위 '재벌 회장님'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 별도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족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방관해 왔다. 또한 일부 대기업들은 이익을 위해서 종업원을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화 하는 등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경영자와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스

13) 김종인, 76-77.

14) 학원변형윤박사 청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경제민주화의 길』 (과주: 한국학술정보(주), 2004), 197-316, 430.

스로 권리를 주장하기에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경영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러한 종업원의 힘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이 각종 노동조합 활성화 제도이다.

한편 이들은 경영자가 근로자를 지나치게 낮은 처우나 비정규직 등 불안한 고용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고자 노동법으로 통칭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최저임금법 등을 통해 경영자가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법으로 강제하려 하고, 현재도 노동법 규제 강화, 산별노조 추진, 비정규직법 제정 등 다양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영자의 절대적인 힘을 견제하기 위해 재벌의 소유분산, 종업원의 경영참여 제도(종업원지주제 등)를 제안하기도 한다.<sup>15)</sup>

#### 4. 양극화 해결책 2: 정부가 분배에 적극 개입

경제민주화 논자들은 지금까지 재벌가를 비롯한 가진 자들의 행태는 끝없는 탐욕을 보여 왔다고 말한다. 가진 자들은 경제적인 힘으로 정치적 로비를 통해 특혜를 받는가하면, 약자인 하청업체의 기술과 이윤을 갈취하여 성장을 가로막고, 가격담합 등의 독과점, 불공정행위, 탈세행위 등 탐욕에 끝이 없다. 따라서 가진 자들의 이와 같은 탐욕을 그냥 내버려두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혹은 합법적이지만 비윤리적인 거대경제세력의 탐욕을 제어하는데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재자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헌법이 있듯 거대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정부의 권한이 커져야 하고 그 힘도 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그런데 경제민주화 정책과제로 등장하는 경제적 약자의 복지혜택 강화, 교육과 보육의 과감한 투자<sup>17)</sup> 등의 현안들은 막대한 추가 재원 없이 실현이 불

15) 학원변형윤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21-227.

16) 김종인, 60-61. 경제민주화 논자 중 재물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학자도 있다. 전철환은 자산가의 이기심에 의한 부의 축적이 최악은 아니지만 그 축적 과정이 생산적이고 정당성을 지닐 때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전철환, 『경제민주화의 위기의 대응철학』 (과주: (주)지식산업사, 2002), 160, 163-164.

가능하다. 더구나 이러한 복지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막대한 재원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비율을 높이는 소위 부자증세가 없이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데 부자증세는 현 체제에서 기존 세법이나 특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민주화가 왜 경제학자가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012년 총선에서 정치인들에 의해 여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 그 답을 짐작하게 한다.

### Ⅲ. 경제민주화에 대한 통일사상적 비평

#### 1. 민주주의: 이상세계를 향한 과도적 체제

통일사상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를 이상 세계 실현을 위한 과도적 체제로 본다. 민주주의에 대한 통일사상적 해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둘째는 하나님의 탕감복귀섭리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 역시 가인편의 민주주의와 아벨편의 민주주의로 분립된다는 측면에서이다.

먼저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전개된 인류역사를 보면 씨족주의, 봉건주의, 군주주의를 거쳐 민주주의를 지향해 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십자가 죽음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이었다. 1차 대전 이후 패전국가가 식민지를 반환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승전 국가까지 식민지를 내놓고 약소국가들을 유엔에 가입시키는 한편, 이들 국가에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어 형제국가로 만든 현상 역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복귀섭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옹호와 남녀평등, 만민평등으로 창조본연의 개성의 가치를 최고도를 추구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원리강론에서는 메시아의 재림을 시사하는 말세의 징후라고 말한다.<sup>18)</sup>

17) 특히 김종인은 교육과 보육은 복지를 넘어 국가의 성장 동력이므로 빛을 내서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펴고 있다. 김종인, 170-173.

둘째로 민주주의 역시 하나님의 탕감복귀섭리의 경륜에 따라 가인형과 아벨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인형의 민주주의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가인형의 인생관을 세우기 위해 유물사상으로 흘러간 계몽사상이 절대주의 사회를 타파하면서 프랑스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인권선언’이 공표되었다. 이처럼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로 바뀌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발전되어, 독일에서의 마르크스주의와 러시아에서의 레닌주의로 체계화됨으로서 공산주의세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아벨형의 민주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 실현되었다. 한편 영·미의 민주주의는 아벨형 인생관의 결실체인 열광적인 기독교 신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한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쳐 영속적인 종교의 자유를 갈망하여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아 1776년에 독립 국가를 스스로 세웠기에 아벨형의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sup>19)</sup>

그런데 원리강론에 따르면 인류를 하나의 이상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이념은 가인형의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없다. 가인형의 인생관은 인간 본성의 내적인 성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벨형의 인생관으로 세워진 아벨형의 민주주의세계에서 새로운 이념이 나와야 한다. 새로운 진리에 의한 완전한 아벨형의 인생관을 세움으로써, 민주주의의 완성적 기대를 조성하여 그 기대 위에서 온 인류를 하나의 세계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한다.<sup>20)</sup>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대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기에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고 그 새로운 이념은 아벨형의 민주주의인 영·미의 민주주의에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영·미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프랑스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로 불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등장해야 할 것이다.<sup>21)</sup>

1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6), 120, 133-134.

1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492-497.

2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521-522.

21) 『원리강론』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이라고 간주할만한 직접적 표현이 없지만 『문선명 선생말씀선집』에서는 민주주의의 경제적 측면을 자유경제체제로 공산주의를 물질 공유체제로 지칭한다.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24권 (서울: 성화출판사, 1984), 106 (1969.7.13.).

## 2. 양극화 원인: 레이건과 박정희의 재조명

본 장에서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레이건과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 먼저 언급해야 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두 인물 모두 통일사상의 관점으로 볼 때 탕감복귀섭리 시대에 중심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 섭리 중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널드 레이건을 통해 미국을 구할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문선명 선생은 1980년 11월 제40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두고 당시 운영하던 신문사인 '뉴스월드'를 통해 레이건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언하는 기사를 신문 1면 특집으로 게재하는 모험을 감행하여, 선거 기간 내내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던 레이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선명 선생은 레이건의 당선 후 그의 지원 하에 1982년 5월 보수 일간지 <워싱턴타임즈>를 창간하여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규합하였다. 레이건 정부 또한 천문학적 비용 문제로 여론에 반대 받던 SDI(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전략방위 계획) 정책을 워싱턴타임즈가 특집기사와 레이건과의 대담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후 SDI 정책은 코르바초프 정권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22)</sup>

한편 통일원리에 따르면 한국은 메시아의 탄생국가로서 아담국가이다. 참부모의 사명으로 탕감복귀시대를 이끌어온 문선명 선생은 1970년대 당시 가난한 한국을 아담국가로서 위신을 세워야 한다고 하며 경제 부흥을 위해 해외 국가인 일본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독일의 기술을 한국에 들여왔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성장 위주의 경제개발계획 역시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70년 전후로 추진되었다.<sup>23)</sup>

이와 같이 레이건과 박정희는 탕감복귀시대에 하늘편 중심인물로 정해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무조건 옳거나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주도 경제개발 정책이 모두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22)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한국을 깨워 세계를 구하라』 (서울: 성화출판사, 2013), 55-56.

23)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12,17,26.

탕감복귀섭리 시대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선한 편(아벨 편)과 악한 편(가인 편)을 조건적으로 구분하고 보다 하나님 편에 가까운 쪽을 택하여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을 뿐, 그 자체로 완벽하고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정책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이 양극화 원인이라는 경제민주화 논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의 격차는 자유경제체제에서 고도성장의 부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하나님이 택한 중심인물들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포기시키고 미국과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동맹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단지 부의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해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며 탕감복귀섭리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3. 양극화 해결책 1: 경영자-종업원 관계를 부모-자녀 관계로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경영자와 종업원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가족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월급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배분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경영자가 회사의 성공에 대한 열매를 독식해서는 안 되고, 종업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된다. 고객이 자신의 창조 가치를 실현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가격 지불의 본질이며, 경영자가 기업 성공과 고객 만족에 대해 종업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이 급료 인상과 복지 증진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24)</sup>

그런데 종업원 중에서도 그 역할과 역량, 노력과 성과가 개인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의 차등 분배는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몫을 가져가거나 종업원에게 지나치게 적은 몫이 돌아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러한 경영자의 욕심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문제에 대하여 통일사상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4) 이상헌, 『공산주의의 종언』 (뉴욕: 통일사상연구원, 1985), 261, 285.; Ward, Thomas, 「통일 사상, 정치 경제, 그리고 새 천년」, 『통일사상 연구논총』 제7집 (2000): 230, 235, 재인용.

경제민주화 논자의 주장처럼 경영자 급여의 상한선을 정하거나 최저임금처럼 종업원의 급여의 하한선을 높여가거나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는 강제적 방법보다, 종업원의 급여를 이익으로 보아 종업원의 급여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배의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sup>25)</sup>

한편 문선명 선생은 노동조합을 공산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이를 강력하게 경계해왔다. 문선명 선생은 부모를 중심한 종적인 원칙과 질서가 없이 횡적인 대중과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반드시 폭력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일례로 노조가 데모대를 이끌고 회사의 부모격인 사장을 잡아서 처단하는 모습은 공산주의자의 행태와 매우 닮아있다는 것이다.<sup>26)</sup>

문선명 선생은 노동조합에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주연합'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제민주화 관련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종업원지주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sup>27)</sup> 관련 내용을 발췌해보면 아래와 같다.

노동자 농민의 유니언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주, 스톡 오너(stock owner), 주주 유니언을 만들라 이거예요. 둘(노동조합과 주주조합)이 합해 가지고 우리 가정의 아기와 여편네를 잘 먹여 살려야 되겠으니 작년 생산보다도 금년은 전부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되는데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노동자 유니언하고 주주 유니언하고 합해 가지고 경쟁하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익 나는 것을 한 3년 동안 주인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나누어 먹는데, 노동자 유니언이 열심히 했으면 몇 프로 더 주고, 주주 유니언이 열심히 했으면 더 받는다 이거예요. ... (중략) ... 회사가 망하게 생겼으니 벌어 대면서 나는 일하겠다,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월급에서 30퍼센트를 회사에 바치고 일하겠다 한다면 유니언들은 어떻

25) 예를 들어 당해 연도 당기순이익이 70억이고 전 임직원의 급여가 30억이라면 함께 100억인데 이중 30%인 30억을 재원으로 하고, 임원:직원의 배분비율을 20:80으로 하였다면 임원들이 6억을 배분받고 직원들이 나머지 24억을 배분받는 식이다. 이상현, 281, 288. Ward, Thomas, 229, 재인용.

26)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225권, 147 (1992.1.12.).

27) 문선명 선생은 노조를 공산당 조직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노조의 어의를 노동조합이 아닌 노시아(러시아) 공산당 조직으로 재해석하기도 하였다.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168권, 107 (1987.9.13.).

게 되겠어요? ... (중략) ... 자, 그러니까 유니언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도 물러가는 거예요. 소련에 유니언이 있어요? 「없습니다.」 중국에 유니언이 있어요? 「없습니다.」 북한에 유니언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진국에 왜 유니언이 있어요? 소련의 외교정책에 의해서 망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일 안 하고 피를 빨아먹으라고 하는 거라구요. 자, 선생님 말 같으면 사회악을 조장하는 유니언 추방 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sup>28)</sup>

#### 4. 양극화 해결책 2: 적정소유의 실현은 결국 양심에 호소해야

통일사상에 따르면 한 개인의 적정소유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양심만이 할 수 있고, 타인이나 특정 조직이 그러한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 한편 인간은 개성진리체이자 연체로서 가치실현욕구<sup>29)</sup>가 모두 다르고 그 크기 또한 다를 수 있다.

경제민주화 논자의 주장에 따르면 적정소유에 대한 기준은 경제적 상황에 따른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 그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적정소유에 대하여 투표로 선출한 대표자가 전문가를 동원하여 정책으로 정하거나, 법으로 그 수준을 정하거나, 국민투표를 하여 다수결로 정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그러한 기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면 가치실현욕구가 매우 크고 연체로서의 격위가 매우 높은 사람의 경우 그 기준이 턱없이 낮다고 느껴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가치실현욕구가 낮고 연체로서의 격위도 낮은 사람의 경우 본인이 적정 수준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양심에 따를 필요가 없어진다. 즉 획일적 기준으로는 누구도 적정소유의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

통일사상의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심이 혼탁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

28)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342권, 236-237 (2003.1.1.).

29) 『통일사상요강』에서는 전체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을 가치실현욕구라 하고 개체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망을 가치추구욕구라 하여 개념을 구분한다.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두의사상)』 (서울: 성화출판사, 1993), 295.

회에서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현실주의적 해결책으로서 양심을 일깨우는 좀 더 나은 체제를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 특정 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근본적인 접근이라 볼 수 없다. 문선명 선생은 어떤 주의나 사상은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지팡이와 같기 때문에 주의나 사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구태여 그 주의나 사상에 이름을 붙인다면 부모주의, 하나님주의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주의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30)</sup>

한편 하나님의 창조이상으로 볼 때, 부모인 하나님이 자녀로 창조한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본연의 가치는 동등하기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환경과 평등한 생활조건을 주시려 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분배와 소비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역시 인체의 위장과 심장과 폐장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인간은 이러한 이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찾아 인간의 본성을 더듬어 나가게 되면, 결국 누구나 동등한 사회주의적 생활 체제를 요구할 것이고, 민의가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되면 민의에 의한 정치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 예견한다.<sup>31)</sup>

그런데 이 같은 사회주의도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분립된다. 하늘편에서는 공생·공영·공의주의를 지향하고 사탄편에서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문선명 선생의 말씀집에 따르면 공생·공영·공의주의는 ‘신본주의적 인본주의’, ‘통일주의’, ‘천주주의’, ‘부모주의’, ‘심정주의’, ‘사랑주의(Lovism)’, ‘하나님주의(Godism)’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움직이는 사회주의라 할 수 있다.<sup>32)</sup>

결론적으로 경제민주화의 사회주의 지향성을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가 아

30) 『평화경』 역시 참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개성진리체 없이 제도 등의 외형적인 요인만으로는 평화세계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편, 『평화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215;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21권, 156, 331.

3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471-474.

32)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8권, 180; 10권, 118, 231; 14권, 319; 15권, 267; 90권, 312; 105권, 25.

나라 공생·공영·공의주의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타일러 헨드릭스는 참사랑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sup>33)</sup> 부의 격차에 대한 근본 해결은 스스로 양심을 회복하여 자발적 재분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모색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 IV.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평준화로

##### 1. 참부모주의에 따른 연체의식 고취

전술하였듯이 경제민주화는 경제 분야에 있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이다. 그런데 통일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부모 없는 형제주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는 싸움을 불러오기 쉽다. 증오에 기반한 부자와 빈자의 싸움은 함께 사는 공생·공영·공의주의로 나가기보다 공산주의적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타락인간이 시장에서 탐욕으로 분배에 실패했다고 해서 타락인간으로 구성된 정부에게 분배를 맡긴다 하더라도 타락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형제간의 빈부격차는 부모의 중재로 형제간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통일사상에 따르면 인류의 조상이자 부모는 최초의 남성과 여성인 아담과 해와가 되어야 했지만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류는 조상이자 부모를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되는 참사랑도 잃어버렸다. 때문에 탕감복귀섭리를 통해 참부모를 다시 찾아 참부모의 축복으로 다시 태어나 핏줄을 통해 참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가정연합에서는 이러한 신인애일체를 이룬 최초의 부부인 문선명, 한학자 양위분을 천지인참부모로 칭한다. 천지인참부모는 신

33) Tyler Hendricks, 「통일사상의 이상사회에 있어서 평등과 질서」, 『통일사상 연구논총』 제1집 (1996): 235.

(하나님)을 중심한 최초의 인간 시조로써 모든 인간은 천지인삼부모에 접붙임을 받는 축복결혼을 통해서만이 신과 심정적 일체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목적에 의하면 인간은 모두 하나의 부모 아래 하나의 가족이다. 인간이 축복결혼을 통해 신인애일체를 체험하면 모든 인간은 참부모를 중심한 연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체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 소유에 대한 갈등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데 모든 재물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 소유한 재물은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면 형제간의 소유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될 이유가 없다.

## 2. 참부모의 경제평준화 제안

문선명 선생 양위분은 일찍이 인류의 참부모 입장에서 모든 타락 인류를 참부모로 인도함과 더불어 인류의 난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인류 전체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해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가. 도쿄와 영국을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 건설의 구상.
- 나. 남, 북미를 기반으로 한 인류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적 수산업 개발 구상.
- 다. 라틴 아메리카의 판타날 프로젝트(생태계 보존/개선)를 통한 미래 이 상사회 모델 구상.
- 라. 첨단 기술을 포함한 세계의 기술 평준화 구상.<sup>34)</sup>

위의 구상을 두고 문선명 선생은 경제평준화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평준화<sup>35)</sup>라는 표현은 문선명 선생이 매우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종종 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하였다. 물은 그 지형과 바람에 따라 높낮이가 다르지만

34) 통일사상연구원, 『두익사상 시대의 도래』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1), 128-129. 평준화를 위한 문선명 선생의 구체적 활동들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한국을 개위 세계를 구하라』 (서울: 성화출판사, 2013) 제1부 참조.

35) 평준화는 각 개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전체적 수준을 평균에 수렴케한다는 개념으로 동일함을 강조하는 평등과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 수평을 이룬다. 또한 육지의 수분이 증발하여 더워지면 비를 뿌려서 다시 식혀준다.

인간의 경제문제를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참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평준화를 이루어 국가의 ‘부자연스러운’ 개입이 없이도 빈부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경제평준화의 논리다.<sup>36)</sup> 이 같은 전 지구적 경제평준화 구상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 하나하나가 국가간, 지역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고 공생·공영·공의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천적 소재가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도 경제평준화와 마찬가지로 평균에 수렴케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즉 경제민주화의 조정 방법은 법과 정책에 의한 타율적 조정인 반면 경제평준화의 조정 방법은 양심에 의한 자율적 조정이다.<sup>37)</sup> 경제민주화 주장에는 양심에 혼탁해진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인간은 타락했는지언정 본심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 회복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러한 경제평준화는 기업체와 정치권, 언론 등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이룰 수 있는 이상이 아니다. 이는 공생·공영·공의주의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실현을 위해 경제, 정치, 윤리분야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듯이, 경제평준화도 3주체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실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특히 부의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는 부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결정적이다. 그런데 부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언론이 참부모 입장을 대신하여 중

36)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181권, 142 (1988.9.5); 198권, 130 (1990.1.28).

37) 『통일사상요강』 역시 적정소유에 대한 판단을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개성진리체이자 연체적 존재인데, 개성진리체로서 개인의 욕망은 모두 다르고 그 크기 또한 연체의 격위가 높을수록 증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두의사상)』, 761.

38) 『통일사상요강』에서 공생·공영·공의주의는 하나의 명사이며, 각각의 개념을 따로 설명한 것은 하나님주의를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공생주의, 공영주의, 공의주의의 3자는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창조이상 세계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두의사상)』, 761, 784.

재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물질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인정을 통한 정신적 만족 또한 만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언론이 부자의 자발적 재분배를 유도하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모범으로 삼아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면 평준화 문화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마치며

앞서 논한 바대로 경제민주화의 사상적 근원에는 사회주의의 이상이 자리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그 형태에 있어서는 이상적 구조를 닮아있지만 내용에 따라 공생·공영·공의주의로 나갈 수도 있고, 공산주의로 회귀할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 담론 역시 자발적 평준화의 문화를 성숙시켜가는 긍정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으나 다수의 힘으로 부자의 부를 빼앗는 폭력적 공산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다.

공산주의적 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유는 인간의 변화를 너무 쉽게 낙관하여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 인간의 이기심이 제거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있었다. 실제로 인간의 이기심이 변화 없는 체제의 변화는 사욕에 의한 독재로 변질되어 더욱 위험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 없는 제도적 접근은 위험하다.<sup>39)</sup>

현재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어 입법 추진이 전례 없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상을 볼 때 부자들의 소유량이 적정 수준을 훨씬 넘었다는 대다수 국민의 경고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점에서는 부자들이 연체로서의 책임의식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자발적 재분배에 나서야 성과의 인정과 더불어 소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배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해결 방향이 다수의 힘에 의한 부자의 재분배 강요로 가서는 곤란하다. 개인 소유의 내용과 크기는 개성이 다르기에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수준이 적정한지는

39) 주재완, 『통일교 사상연구 II』 (충남: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4), 226-227.

본인의 양심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나 집단이 어떠한 적정 수준을 설정하여 재분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성장과 발전 동력으로 부여된 가치추구의 욕구와 가치실현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선명 선생이 주창한 경제평준화는 참부모와 하나 된 축복가정이 주체가 되어 연체의식을 가지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 먼저 희생하는 자발적 재분배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기구의 차원까지, 경제 주체 뿐 아니라 정치 및 언론 주체까지 유기적 참여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제 평준화를 향한 문화가 정착되려면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질 것이다. 언론이 경제평준화를 위해 부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공적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부의 재분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양심적인 경제인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일련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종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파주: 동화출판사, 2013.
- 노진석. 「한국헌법과 경제민주화」.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서울: 성화출판사. 1984-
- 민주당 경제민주화 모임 20인 의원 공저. 『을(乙)을 위한 행진곡-을(乙)이 주인인 세상, 경제 민주화 법안들』. 서울: (주)메디치미디어, 2013.
- 변형운.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파주: (주)지식산업사, 2012.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한국을 깨워 세계를 구하라』.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6.
- 이준석. 「통일교 경제활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 이춘구. 『경제민주화 자유와 평등의 조화』. 서울: 이지출판, 2013.
- 이상현. 『공산주의의 종언』. 뉴욕: 통일사상연구원, 1985.
- 전철환. 『경제민주화와 위기의 대응철학』. 파주: (주)지식산업사, 2002.
- 주재완. 『통일교 사상연구 II』.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4.
- 참부모님말씀편찬위원회 편. 『평화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통일사상연구원. 『두의사상 시대의 도래』. 아산: 선문대학교 출판부, 2001.
- \_\_\_\_\_. 『통일사상요강(두의사상)』.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학현변형운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경제민주화의 길』.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4.
- 한국경제연구원 편. 『경제민주화의 함정』.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12.
- 허화평.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다』. 서울: 도서출판 기파랑, 2014.
- Hendricks, Tyler. 「통일사상의 이상사회에 있어서 평등과 질서」. 『통일사상 연구논총』 제1집 (1996): 221-256.
- Ward, Thomas. 「통일 사상, 정치 경제, 그리고 새 천년」. 『통일사상 연구논총』 제7집 (2000): 225-238.

■ Abstract ■

## A Study on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under the Unification Thought

Lee, Jun Seok

Graduate School of Theology, Sun Moon University

Both parties in the current political sphere in Korea are adopting economic democratization as the key policy of their party. The emergence of discussions on economic democratization as a hot issue in society is not unrelated with the recent economic situation that continue to deteriorate due to sluggish economic growth, economic recession and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The increase of 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and increased disparity of wealth has led to the surge in demand for the redistribution of the wealth by the high-income bracket known as chaebols. Economic democratization is an attempt to resolve capitalism's polarization problem by adopting democratic elements into the economic field like those found in the political field. It is grounded in Paragraph 2,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main argument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the power of labor unions should be strengthened to maintain balance of force between the manager (capitalist) and worker (laborer), and the state should actively intervene in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by employing a wide range of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ystem, regulations on chaebols and progressive tax system.

However, from the viewpoint of the Unification Thought, it is difficult to find a fundamental resolution to the issue of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with such economic democratization measures. The Unification Thought views democracy not as an ideal form of system but rather a transitional system in the era of the restoration through indemnity. It clearly defines this system's limitations which is regarded as a parent-less and unstable brotherhood where all matters are decided by majority agreement. The disparity of wealth is a natural result in the course of manifesting people's value as an individual truth body. The level of each individual's appropriate possession differs depending on the status of their conscience and also their status as a connected body. Consequently, any attempt to enforce a uniform level of appropriate possession for each individual by the power of labor unions or the state is difficult to satisfy anybody. The Unification Thought proposes an "economic equality movement" that can be carried out as a global human project rather than through economic democratization where the majority has the power to force the minority into appropriate possession. I believe such campaigns are in the right direction toward the realization of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and universally shared values. The organic collaboration between financial circles, political circles and the media are required for the shift of a social viewpoint from economic democratization to economic equality.

Key words: Economy, Democracy, Economic democratization, Economic standardization, Interdependence, Mutual prosperity, Universally shared values.

- ◎ 투고일: 2016년 8월 30일
- ◎ 심사기간: 2016년 9월 1일~9월 14일
- ◎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0일